

# 산업부, 원전수출기반 다진다 수주역량 강화에 47.9억 투입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 시행  
민관 수주역량 집결... 경쟁력 ↑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조속 가동”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민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재고를 위해 총 47억9000만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이번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해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원전을 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소노미에 포함했고, 내년부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할 예정이다, 4월 영국도 원전비중을 현재 16%에서 최소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와 기술력을 홍보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생산·수출 막힌 식용유... 소비자가 고공행진  
최대 해바라기유 수출국이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서 생산과 수출이 막혀 식용유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오뚜기 콩기름(900mL)의 5월 평균 판매가격은 49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74원)보다 33.8% 올랐다. 같은 기간 해표 식용유(900mL)는 4071원에서 4477원으로 상승했다. 15일 오전 서울시내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식용유를 고르고 있다. /뉴스

## 고용부, 건설현장 ‘12대 기인물’ 집중 점검

3년간 사망사고 60% ‘기인물’ 원인  
“기본적인 조치 지켰다면 예방 가능”

최근 3년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0명 중 6명 팔로 지게차나 사다리 등 12대 주요 시설·장비(기인물)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1000곳 이상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관련 집중 점검을 벌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자 566명 중 344명(60.8%)이 12대 기인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를 보면 옥상이나 통로의 끝처럼 끊어지거나 잘린 부분(단부)·창문처럼 열렸거나 뚫린 부분(개구부)에서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붕 40명, 비계·작업 발판 39명, 굴착기·고소 작업대 각 28명, 사다리 22명, 달비 21명, 트럭 19명, 이동식 비계 18명, 거꾸집·동바리 17명, 이동식 크레인 13

명 등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며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 지켰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오는 25일 전국 1000곳 이상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일제 점검에 나선다. 사망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50억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하청업체 40%, 원자재값 인상에도 단가 제자리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사실상 인상분 부담 모두 떠안아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철강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중소 하청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하고 부담을 모두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한편 오는 7월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4월 6일 ~ 5월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01개 업체가 응답했다. 최근 철광석과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와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뉴스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에 그쳤고, 조항이 아예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7.9%였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요청에 51.2%만 협의를 개시했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재자 등 가격상승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54.6%에 달하는 등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5월말부터는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4월부터 가동중인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인도, 밀 수출 중단...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영향 제한적”

인도가 자국 내 이상고온으로 인해 밀 작황 부진이 예상되면서 밀 수출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

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세계 수출량의 4% 수준을 차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고용부, ‘공정채용’ 질서 확립 나선다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 점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이나 결혼 여부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거짓채용 등을 광고하다 적발된 사업장은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 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6~27일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다음 달 13~30일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459곳 대비 약 30% 늘어났다.

고용부는 특히,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 120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병수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채용절차법뿐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불공정 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